

소비자들 더 똑똑해졌다



재무해결 · 권리주장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역량 지수는 지난 2010년의 61.5점 보다 2.5점 상승한 64.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부채 관리, 위험 관리 및 정보 이해·활용 부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비자 역량 조사는 총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 역량 지표를 활용했다. 각 부문별로 보면 ▲사용 분쟁해결(66.96점) ▲소비사회 적응(66.40점) ▲소비자권리 주장(66.16점)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정보 이해·활용(61.08점) ▲위험 관리(61.65점), ▲자산부채 관리(61.86점) 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역량이 소득·연령·지역별로도 차이 커,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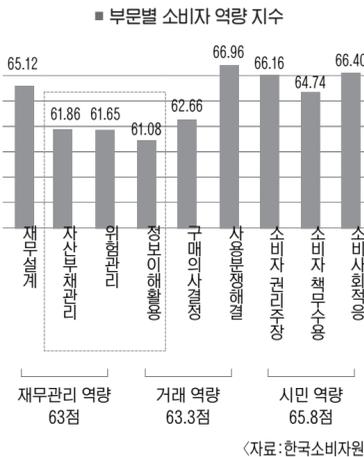
월 평균 가계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계층의 소비자 역량 지수는 56.85점으로 45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65.45점)에 비해 8.6점이나 낮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비자 역량의 차이는 ▲재무관리 5.1점 ▲거래역량 11.9점 ▲시민역량 8.3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소비자 집단이 66.34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 집단이 60.67점으로 제일 낮았다. 다만 재무관리 영역에서는 20대 소비자의 역량 지수(58.4점)가 오히려 60대(62.0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대 청년층 소비자를 위한 재무교육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역량지수 64점...4년전보다 2.5 ↑

소득 높을수록 소비자 역량 높아

소득·연령·지역별 맞춤 대책 필요



소비자 재무교육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소비자 역량 지수를 비교한 결과, 재무교육을 경험한 집단의 재무관리 역량 지수(68.58점)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지수(62.53점)보다 6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21.5%)은 '자신의 재무관리 역량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인 소비자를 위한 재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 소비자의 역량 지수가 65.6점으로 광역시(63.61점)나 중·소도시(63.6점)에 비해 약 2점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자, 20대 청년층, 전국권 소비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 및 정보제공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향후에도 전국 단위의 소비자 역량 지수를 3년 주기로 조사, 소비자 정책의 성과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소비자 역량 지수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력, 실천적 역량을 뜻한다. 재무관리 역량, 거래 역량, 시민 역량의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 한다.



이더블에이오 · 자산관리

추석 선물 배달사고 주의보

예약 안됐거나 지연...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 도움

A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에게 선물하려고 인터넷으로 사골세트를 주문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 택배로 물품을 받아서 차에 싣고 지방에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와 배송 사고가 났다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나 배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모처럼 효도를 하고 싶었던 A씨의 계획은 무산됐다.

B씨는 지난해 추석 제주도에 가려고 한 달 전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대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가보니 예약 자체가 되지 않았다. 너무 황당해서 여행사에 전화

를 걸었지만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종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에 연락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므로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택배가 당초 약속된 날짜에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물품가격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와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줄것을 촉구하는 형사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져라”

피해 인정 신청 을 92건 추가...기업 처벌 촉구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지 3년이 된 가운데 올해 들어 92명이 추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심사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피해조사 때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받는다. 지난 22일까지 접수된 신규 피해신고 의심 사례는 모두 92건이다. 이번 신규심사 신청은 정부가 시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8월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의 산모 폐 손상·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후 사망 및 질환자 피해 의심 접수수가 잇따랐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공식 조

사를 실시해 올해 3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총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 판정 불가 사례는 7건이었다. 이 가운데 60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문제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피해 신고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년, 살인 기업 규탄 및 피해자 추모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음식물처리기 신개념 제품!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모집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일주일체험 무이자할부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사용 후 결정
국산 100% 합법!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 환경부(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 KBS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 061) 245-2457